

## OECD회원국의 사회통합과 자살률

- OECD회원국의 자살률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28.4명으로 30개 비교대상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통계청(2009)<sup>1)</sup>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고해성 자해)로만 15,413명이 사망하였으며, 일평균 42.2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적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 헝가리(19.6명), 일본(19.4명), 핀란드(17.3명) 순으로 높았고, 그리스(2.5명), 멕시코(4.5명), 이탈리아(4.9명)가 낮은 국가로 분류됨.
  -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헝가리와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198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1985년 10.2명에서 2006년 21.5명, 2009년 28.4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특징을 보임.
- 사회통합 정도와 자살률의 관계<sup>2)</sup>를 살펴보면, 주·객관적 사회통합 지표로 설정한 사회지표들과 국가의 자살률은 일정 정도 연관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 객관적 사회통합 지표로 설정한 GDP대비 사회지출, 보건의료비지출, 노령연금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감소하는 반면, 성별 임금격차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살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주관적 사회통합 지표로 설정한 타인에 대한 신뢰도 및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자살률은 타인과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에서 자살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1) 통계청(2009), 『사망원인통계』, KOSIS.

2)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사회통합 정도와 규율정도로 자살의 원인을 설명한다. 사회통합 및 사회적 규율이 약할 경우,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 발생하고 반대로 그 정도가 강할 경우에 이타적 자살과 숙명적 자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기적 자살은 개인의 욕구(욕망)가 충족되지 않고 좌절될 때 발생가능성이 높고, 아노미적 자살은 한 사회 내 패러다임과 공동체적 규범이 없어지는 혼란 속에서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표 1> OECD회원국의 자살률 추이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10.2	7.9	11.2	14.1	24.7	21.5	-	-	28.4
헝가리	40.1	35.3	28.1	27.4	21.0	19.6	19.4	19.6	19.8
일본	18.4	14.5	14.3	19.1	19.4	19.1	19.4	19.4	19.7
핀란드	22.8	27.8	24.7	20.4	16.5	18.0	16.6	17.3	17.3
프랑스	20.5	17.7	17.5	15.6	14.6	14.1	13.5	13.8	-
스위스	22.5	19.1	17.5	16.2	14.1	14.0	14.3	-	-
폴란드	13.2	12.9	13.6	14.0	13.8	13.2	12.0	12.9	-
오스트리아	24.8	20.5	19.2	16.8	13.8	12.6	12.5	11.9	12.0
뉴질랜드	10.5	13.4	14.8	12.0	12.2	12.3	11.2	-	-
룩셈부르크	13.3	16.0	13.6	12.8	9.3	11.9	14.7	7.8	-
체코	-	17.8	15.2	13.8	12.7	11.4	11.1	11.0	11.4
스웨덴	16.2	15.0	13.2	10.9	11.5	11.3	10.6	11.0	-
칠레	6.7	6.4	7.1	10.1	10.4	10.8	11.0	-	-
노르웨이	13.6	14.4	11.8	11.6	10.9	10.8	9.6	9.8	10.9
아일랜드	8.4	10.1	11.2	11.8	10.4	10.2	10.0	9.1	11.3
미국	11.9	11.9	11.4	9.8	10.1	10.2	10.5	-	-
덴마크	24.8	20.5	15.0	11.4	9.5	9.9	-	-	-
아이슬란드	14.1	15.9	10.2	18.0	10.4	9.9	11.4	11.1	10.3
독일	17.6	14.5	13.1	11.0	9.7	9.1	-	-	-
네덜란드	10.6	8.7	8.7	8.2	8.3	8.1	7.1	7.4	7.8
호주	11.7	12.5	11.5	11.8	-	7.5	-	-	-
영국	8.2	7.4	6.8	-	6.0	6.1	5.8	6.3	6.2
스페인	6.2	6.8	6.9	6.9	6.3	5.9	5.7	6.0	-
이탈리아	7.4	6.5	6.6	5.8	-	4.8	4.9	-	-
멕시코	2.7	3.0	3.8	3.8	4.4	4.3	4.2	4.4	-
그리스	3.7	3.1	3.0	3.0	2.9	2.9	2.5	2.6	2.8
벨기에	20.5	16.6	18.5	-	16.2	-	-	-	-
캐나다	12.4	12.0	12.6	10.8	-	-	-	-	-
포르투갈	9.5	8.0	7.0	4.1	-	-	7.3	7.4	7.3
슬로바키아	-	-	13.3	12.4	10.9	-	-	9.4	9.3

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를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data 2011(<http://stats.oecd.org>).

〈표 2〉 국가별 자살률과 사회통합 지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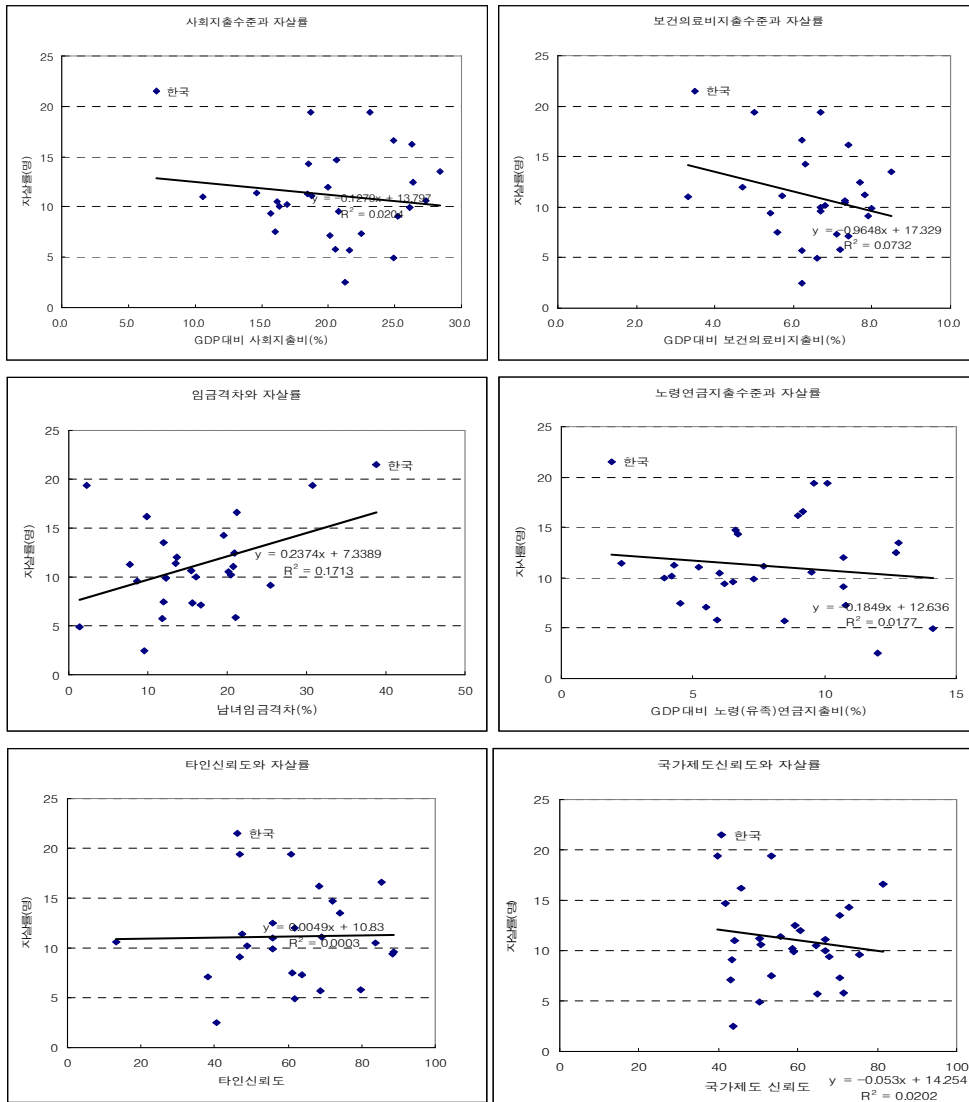
	자살률 (2007)	GDP대비 사회지출비 중(2007)	보건의료 지출수준 (2008)	임금격차 (2008)	노령(유족)연 금 지출수준 (2007)	타인에 대한 신뢰도(2008)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도(2008)
한국	21.5	7.5	3.5	38.8	1.9	46.2	40.6
헝가리	19.4	23.1	5.0	2.2	9.6	46.8	39.9
일본	19.4	18.7	6.7	30.7	10.1	60.7	53.4
핀란드	16.6	24.9	6.2	21.2	9.2	85.5	81.6
벨기에	16.2	26.3	7.4	9.9	9.0	68.6	45.7
룩셈부르크	14.7	20.6			6.6		73.0
스위스	14.3	18.5	6.3	19.5	6.7	74.2	70.6
프랑스	13.5	28.4	8.5	12.0	12.8	55.8	59.2
오스트리아	12.5	26.4	7.7	20.9	12.7	61.8	60.5
폴란드	12	20.0	4.7	13.7	10.7	47.4	55.5
아이슬란드	11.4	14.6		13.5	2.3		50.3
뉴질랜드	11.2	18.4	7.8	7.8	4.3	69.1	67.0
체코	11.1	18.8	5.7	20.7	7.7	55.7	44.2
칠레	11	10.6	3.3		5.2	13.4	50.7
스웨덴	10.6	27.3	7.3	15.4	9.5	83.7	64.6
미국	10.5	16.2	7.3	20.1	6.0	48.9	58.5
캐나다	10.2	16.9	6.8	20.4	4.2		66.9
아일랜드	10	16.3	6.7	16.1	3.9	55.8	58.9
덴마크	9.9	26.1	8.0	12.3	7.3	88.8	75.3
노르웨이	9.6	20.8	6.7	8.6	6.5	88.3	67.9
슬로바키아	9.4	15.7	5.4		6.2	47.0	43.3
독일	9.1	25.2	7.9	25.4	10.7	61.1	53.4
호주	7.5	16.0	5.6	11.9	4.5	63.9	70.5
포르투갈	7.3	22.5	7.1	15.6	10.8	38.1	43.1
네덜란드	7.1	20.1	7.4	16.7	5.5	79.7	71.7
영국	5.8	20.5	7.2	21.0	5.9	68.9	64.9
스페인	5.7	21.6	6.2	11.8	8.5	61.9	50.2
이탈리아	4.9	24.9	6.6	1.3	14.1		49.1
멕시코	4.2	7.2	2.8		1.4	26.1	38.4
그리스	2.5	21.3	6.2	9.6	12.0	40.4	43.8

주: 임금격차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성별 중위임금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OECD, Health data 2011(<http://stats.oecd.org>).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그림 1] 사회통합 정도와 자살률의 관계



주: 멕시코를 제외한 29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자살의 원인을 본고에서 설정한 몇 가지 지표로 모두 설명할 수 없으나, 사회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지표(proxy index)와 자살률은 일정한 상관성이 있어 보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자살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KLI**

(반정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